

< 2018 국가7급 행정학 기출문제 >

01. 행태적 접근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의 입장을 취한다.
- ②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 ③ 연구에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지 않는다.
- ④ 사회현상을 관찰 가능한 객관적 대상으로 보며, 인간의 주관이나 의식을 배제하고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한다.

[정답] ③ 인식론적 근거로서 논리실증주의를 신봉하는 행태적 접근방법은 행태의 규칙성, 상관성 및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입증하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아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과학적 연구를 위해 가치문제를 연구대상에서 제외한다.

02. 신엘리트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 무의사결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 ② 모스카(Mosca)나 미헬스(Michels)등에 의해 대표되는 고전적 엘리트이론과 달리 밀즈(Mills)의 지위접근법이나 헌터(Hunter)의 명성적 접근방법을 도입하였다.
- ③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권력은 두 가지 얼굴이 있다고 주장하며, 이 가운데 하나의 측면만을 고려하는 다원주의를 비판하였다.
- ④ 엘리트는 정책문제의 정의와 의제설정과정에서 은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실증적 분석방법론의 활용이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정답] ② 1950년대 미국 사회를 대상으로 논의된 미국의 엘리트론이 다알(R. Dahl) 등의 다원주의자들에 의해 비판을 받게 되자, 소위 신엘리트론자로 불리는 바흐라흐와 바라츠(P. Bachrach & M. Baratz)가 「권력의 두 얼굴: Two Faces of Power」에서 무의사결정론을 근거로 다원주의론을 비판하였다. 바흐라흐와 바라츠는 다알의 실증적 접근방법이 단순한 명성에 의하여 엘리트의 권력 행사를 파악하려고 한 헌터의 방법보다는 우수하지만, 엘리트에 의한 권력 행사의 다른 하나의 측면을 고려하지 못하였다고 비판하면서, 엘리트들은 자신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03.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으로만 묶은 것은?

ㄱ. 지방자치인재개발원	ㄴ. 공정거래위원회
ㄷ. 특허청	ㄹ. 국가기록원
ㅁ. 국립중앙박물관	ㅂ. 문화재청

- ① ㄱ, ㅂ ② ㄴ, ㄷ
- ③ ㄷ, ㅁ ④ ㄹ, ㅁ

[정답] ④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문화재청은 중앙행정기관이고, 지방자치인재개발원·국가기록원(행정안전부)과 국립중앙박물관(문화체육관광부)은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이다.

04. 혼합주사모형(mixed-scanning model)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정책 결정과정을 이미 프로그램화되어 있는 특정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한다.

② 정책의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구분한다.

③ 갈등의 준해결, 문제 중심의 탐색, 불확실성의 회피, 조직의 학습, 표준운영절차(SOP)의 활용 등을 특징으로 한다.

④ 상황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보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극히 제한된 투입 변수의 변동에 주의를 집중하여 의사결정을 한다.

[정답] ② 혼합주사모형은 정책의 결정을 근본적 결정(합리모형-숲-개괄)과 세부적 결정(점증모형-나무-미시적)으로 구분한다.

① 사이버네틱스모형이다.

③ 회사모형이다.

④ 사이버네틱스모형이다.

0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상 공공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②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 받은 준정부기관을 의미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답]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제4조(공공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

1. 구성원 상호 간의 상호부조·복리증진·권익향상 또는 영업질서 유지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2.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3.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
제5조(공공기관의 구분)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공공기관을 공기업·준정부기관과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지정하되,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직원 정원이 50인 이상인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 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세분하여 지정한다.

1. 공기업

가. 시장형 공기업 :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이고,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공기업

나. 준시장형 공기업 : 시장형 공기업이 아닌 공기업

2. 준정부기관

가.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을 관리하거나 기금의 관리를 위탁받은 준정부기관

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이 아닌 준정부기관

06. 정책 평가의 내적 타당성과 외적 타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외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②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는 내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④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외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정답] ② 준실험이 갖는 약점은 주로 외적 타당성보다는 내적 타당성에 관한 것이다. 즉 준실험은 내적 타당성이 낮다.

① 역사요인, 성숙요인, 회귀요인은 모두 내적 타당성 저해 요인이다.

③ 실험대상자들이 실험의 대상으로 자신들이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효과(호손효과)는 외적 타당성의 저해요인이다.

④ 정책집행과 정책효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평가는 내적 타당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07. 호그우드(Hogwood)와 피터스(Peters)의 정책변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정책혁신은 기존의 조직과 예산을 활용하여 이전에 관여한 적이 없는 새로운 정책분야에

개입하는 것이다.

② 정책종결은 현존하는 정책을 완전히 소멸시키는 것으로 정책수단이 되는 사업과 지원 예산을 중단하고 이들을 대체할 다른 수단을 결정하지 않은 경우이다.

③ 과속차량 단속이라는 목표를 변경하지 않고 기존에 경찰관이 현장에서 직접 단속하는 수단을 무인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한 단속으로 대체하는 것은 정책승계 중 선형적(linear) 승계에 해당한다.

④ 정책유지는 현재의 정책을 기본적으로 유지하면서 정책수단의 부분적인 변화만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 ① 정책혁신은 현재의 정책이나 활동이 없고, 담당조직도 없으며 예산이나 사업활동도 없는 '무'에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다.

08. 동기이론 중 과정이론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동기부여의 강도를 산정하는 기본개념으로 유인가(valence), 수단성(instrumentality), 기대감(expectancy)을 제시하였다.
ㄴ. 직무가 조직화되는 방법에 따라 조직원의 노력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에 착안하여 모든 직무를 다섯 가지 핵심 직무 차원으로 구분했다.
ㄷ. 개인은 업적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되며 이때 주어지는 보상은 공평한 것으로 지각되어야 하는데, 개인이 불공평하다고 인식하면 만족을 줄 수 없게 된다고 본다.
ㄹ. 인간의 욕구를 존재, 관계, 성장의 3단계로 나누고 '좌절-퇴행' 접근법을 주장한다.
ㅁ. 인간은 미성숙상태에서 성숙상태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성격변화를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ㅁ

[정답] ① ㄱ(Vroom의 기대이론), ㄴ(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론), ㄷ(Adams의 공정성이론)은 과정이론이고, ㄹ(Alderfer의 ERG이론), ㅁ(Argyris의 성숙-미성숙이론)은 내용이론에 속한다. Hackman & Oldham의 직무특성론은 내용이론과 과정이론의 양면성이 있다.

09. 공무원 임용시험의 효용성을 측정하는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시험의 타당성은 시험이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실제로 얼마나 정확하게 측정했는가를 의미하며 그 종류에는 기준타당성, 내용타당성, 구성타당성 등이 있다.

② 내용타당성은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된다.

③ 측정 대상을 일관성 있게 측정하는 정도를 신뢰성이라고 하며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시험을 반복하여 치르더라도 결과가 크게 변하지 않을 때 신뢰성을 갖게 된다.

④ 신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재시험법(test-retest)과 동질이형법(equivalent forms) 등이 사용된다.

[정답] ② 시험 성적이 직무수행실적과 얼마나 부합하는가를 판단하는 타당성으로 두 요소 간 상관계수로 측정되는 것은 기준타당성이다.

10. 공무원 인사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직업공무원제도는 공직을 직업전문 분야로 확립시키기도 하지만, 행정의 전문성 약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② 엽관주의하에서는 행정의 민주성과 관료적 대응성의 향상은 물론 정책수행 과정의 효율

성 제고도 기대할 수 있다.

③ 대표관료제는 역차별 문제의 발생과 실적주의 훼손의 비판이 제기되며, 사회적 소외집단을 배려하는 우리나라의 균형인사정책은 미국의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관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일반적으로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는 그대로 둔 채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정답] ④ 총액인건비제도는 기구·정원 조정에 대한 재정당국의 중앙통제를 완화하고 수당의 신설·통합·폐지와 절감예산 활용 등에서의 부처 자율성을 부여하는 특성을 갖는다.

11. 지방재정의 구성요소 중 의존재원의 기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유도·조성을 통한 국가차원의 통합성 유지
- ② 지방재정의 안정성 확보
- ③ 지방재정의 지역 간 불균형 시정
- ④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 촉진

[정답] ④ 의존재원은 상급자치단체나 중앙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재원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과 지방분권화를 저해한다.

12. 국세에 해당하는 것으로만 묶은 것은?

ㄱ. 취득세	ㄴ. 자동차세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ㅁ. 등록면허세	ㅂ. 주세

- ① ㄱ, ㄷ
- ② ㄴ, ㄷ
- ③ ㄷ, ㅁ
- ④ ㄹ, ㅂ

[정답] ④ ㄷ. 종합부동산세, ㄹ. 인지세, ㅂ. 주세이며, 나머지는 지방세에 해당한다.

국세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세"(國稅)란 국가가 부과하는 조세 중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소득세
- 나. 법인세
- 다. 상속세와 증여세
- 라. 종합부동산세
- 마. 부가가치세
- 바. 개별소비세
- 사. 교통·에너지·환경세
- 아. 주세(酒稅)
- 자. 인지세(印紙稅)
- 차. 증권거래세
- 카. 교육세
- 타. 농어촌특별세

13. 「국가재정법」 및 「지방자치법」상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회와 지방의회에 회계연도 개시 며칠 전까지 예산안을 제출해야 하는가?

정부	광역지방자치단체	기초지방자치단체
① 90일	40일	30일
② 90일	50일	30일
③ 120일	50일	40일
④ 120일	50일	30일

[정답] ③ 중앙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 광역지방자치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전, 기초지방자치단체는 4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33조(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127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비용편익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재화에 대한 잠재가격(shadow price)의 측정과정에서 실재가치를 왜곡할 수 있다.
- ② 내부수익률(internal rate of return)은 순현재가치를 영으로 만드는 할인율을 말한다.
- ③ 칼도-히क्स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한다.
- ④ 정책대안이 가져오는 모든 비용과 편익을 측정하려고 하며, 화폐적 비용이나 편익으로 쉽게 측정할 수 없는 무형적인 것도 포함된다.

[정답] ③ 칼도-히क्स기준(Kaldor-Hicks criterion)은 재분배적 편익(형평성)보다 효율성의 문제를 중시하는 기법이다. 재분배적 편익의 문제를 중시하는 것은 로렌즈곡선과 지니계수이다.

15. 행정윤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 ② 각급 학교의 입학·성적·수행평가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부정청탁에 해당한다.
- ③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내부고발자 보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 ④ 공직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국가공무원법」에 규정되어 있다.

[정답] ④ 공직자 행동강령(공무원 행동강령)은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으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었다.

공무원 행동강령

제1조(목적) 이 영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행동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 지방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없다.
- ③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의회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답] ③ 외채를 발행하거나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나 제주특별자치도는 특별법에 의해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요하지 않는다.

- ①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이미 발행한 지방채의 차환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외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를 위한 자금 조달에 필요할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6호는 교육감이 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 4. 지방채의 차환

5.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교부금 차액의 보전

6. 명예퇴직(「교육공무원법」 제36조 및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신청자가 직전 3개 연도 평균 명예퇴직자의 100분의 120을 초과하는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명예퇴직 비용의 충당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재정 상황 및 채무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다만, 지방채 발행 한도액 범위더라도 외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기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받은 범위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제2항에 따른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의 장은 그 조합의 투자사업과 긴급한 재난복구 등을 위한 경비를 조달할 필요가 있을 때 또는 투

자사업이나 재난복구사업을 지원할 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대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에서 조합의 구성원인 각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발행한 지방채에 대하여는 조합과 그 구성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상환과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진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26조(지방채 등의 발행 특례) 도지사는 제주자치도의 발전과 관계가 있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지방재정법」 제11조에도 불구하고 도의회의 의결을 마친 후 외채 발행과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한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하려면 도의회 재적의원 과반수가 출석하고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

17. 참여예산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브라질의 포르투 알레그리(Porto Alegre)시는 참여예산제도를 도입한 대표적인 사례다.

② 예산과정에서의 시민참여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모두 가능하지만, 참여예산제는 주로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③ 참여예산제는 과정적 측면보다는 결과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④ 예산 과정의 단계별로 볼 때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다.

[정답] ③ 예산편성 단계에서의 참여에 초점을 둔 참여예산제는 결과적 측면보다는 과정적 측면의 이념을 지향한다.

18. 정부간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 외에도 포괄적인 권한을 지닌다.

③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며,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정답] ③ 주민자치국가인 영국의 경우 개별적으로 수권받은 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권을 보유(개별적 지정주의)하지만,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금지된다.

① 미국 건국초기에는 연방의 권한이 상대적으로 약했으며, 연방과 주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았다.

② 딜런의 규칙(Dillon's rule)에 의하면 지방정부는 '주정부의 피조물'로서 명시적으로 위임된 사항만 권한을 지닌다.

④ 일본의 경우 메이지유신 이래 강력한 중앙집권적 체제를 유지해 왔으나, 국가의 관여를 폐지하거나 축소시키는 등의 분권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

19. 민원행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행정체제의 경계를 넘나드는 교호작용을 통하여 주로 규제와 급부에 관련된 행정산출을 전달한다.
- ② 행정기관의 장은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않을 수 있다.
- ③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 ④ 행정기관은 사경제의 주체로서 민원을 제기할 수 없다.

[정답] ④ 행정기관은 민원인에서 제외되나, 행정기관이 사경제의 주체인 경우 민원을 제기할 수 있다.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민원인"이란 행정기관에 민원을 제기하는 개인·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다만, 행정기관(사경제의 주체로서 제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행정기관과 사법(私法)상 계약관계(민원과 직접 관련된 계약관계만 해당한다)에 있는 자, 성명·주소 등이 불명확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제21조(민원 처리의 예외) 행정기관의 장은 접수된 민원(법정민원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을 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를 해당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1.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거나 국가기밀 또는 공무상 비밀에 관한 사항
- 2. 수사, 재판 및 형집행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착수된 사항
- 3. 행정심판, 행정소송, 헌법재판소의 심판,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4. 법령에 따라 화해·알선·조정·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5. 판결·결정·재결·화해·조정·중재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관계에 관한 사항
- 6. 감사원이 감사위원회의의 결정을 거쳐 행하는 사항
- 7.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행하는 사항
- 8.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9.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20. 「국가재정법」상 재정건전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액 총액의 비율을 말한다.
- ②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는 국가채무에 해당한다.
- ③ 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④ 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정답] ① 국세감면율이란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제88조(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당해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

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